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4-3호

발행일: 2024. 2. 5. (월)

제412회 국회(임시회, 2024. 1. 15. ~ 2024. 2. 8.)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II
- 나. 문화재 영향진단 제도 도입
- 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12회 국회(임시회)는 2024년 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2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월 2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79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12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일명 ‘주식 리딩방’을 규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3)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로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12회 국회의 2024년 1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79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3	정무위원회(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2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 의원 등 10인
1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 의원 등 10인
1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 의원 등 10인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철승 의원 등 10인
1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 의원 등 10인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의원 등 11인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의원 등 10인
2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0인
2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3	기획재정위원회(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4	교육위원회(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2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 의원 등 10인
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28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3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의원 등 14인	
3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의원 등 10인	
32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0인	
33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0인	
34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1인	
35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0인	
3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등 14인	
3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 등 11인	
38		외교통일위원회(1)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1인
39	국방위원회(3)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4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4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6		행정안전위원회(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47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의원 등 12인
4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 의원 등 15인
4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50	문화체육관광 위원회(5)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의원 등 13인
51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10인
5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 의원 등 11인
5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5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5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 위원장
56		문화재영향진단법안	김승수 의원 등 10인
5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 의원 등 10인
58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1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6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6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장
62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0인
6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등 10인
6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 의원 등 10인
6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0인
66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의원 등 10인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10인
68	보건복지위원회(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69	국토교통위원회(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7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6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77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윤재옥 의원 등 261인
78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홍 의원 등 12인
7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 의원 등 11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II, 문화재 영향진단 제도 도입,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II

개요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금융시장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에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가 ▲등록하지 않고 1:1 투자자문 ▲사설 HTS 판매 형태의 미등록 일임 증가 ▲신고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유튜브 주식방송 ▲허위·과장광고 ▲금융회사 사칭 등 여러 형태로 문제되고 있으며, 보이스 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건전한 금융환경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민생금융범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져 눈길을 끄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3-11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이슈 등 참조).

2024년 1월 25일 본회의에서는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여 광범위한 개인투자자 유인이 가능해지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의 증가, 허위·과장광고 및 무자격자의 자문·일임에 따른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p>	2024-01-25 (원안가결)
2		<p>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 <p>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이 특별법으로 제정·시행되었으나,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의 경우 조직화·대형화·지능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것임.</p>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금융위)

과제목표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

주요 내용

(예대금리 공시 개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단축(3개월 → 1개월)

★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 추진

(간편결제수수료)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및 주기적인 점검 추진

(모바일 OTP 확산) 쉐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

(금융분쟁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Fast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 단축

(펫보험)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추진

2023년 정부 업무보고(금융위원회, 2023. 1. 30)

8.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들을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방안 마련, 전환사채 이용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 불법·불건전 영업을 사전차단하고 사후 제재·처벌 강화

① 신·변종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사기이용계정 지급정지*, 통장협박**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 가상자산거래소 보이스피싱 피해자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구제절차 적용 등

**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②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신속한 차단*으로 서민피해 예방

* 정부검찰 등 외 인터넷진흥원·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도 전화번호 차단 요청 허용

③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입원선임 제한 등)의 신속한 제도화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④ 강력보험범죄, 조직적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인수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추진

*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가입시 재정심사 강화 등

⑤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무자본 M&A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전환사채 발행·유통시 공시의무 강화 등 투자자 보호방안 강구

⑥ 불법 주식리딩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정비*(「자본시장법」 개정)

* (1) SNS·채팅방 등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한 영업 금지

(2)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광고규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에 대한 당국의 대응역량 강화

① 불법사금융 및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금융당국·수사기관간 공조강화*

* 불법사금융 척결 TF, 불법사금융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및 수사·단속 적극 지원

②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③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 금융회사-금융정보분석원간 정보교류 확대 등 추진

* (1)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를 준법감시인과 구분하여 별도 지정, 역할 강화

(2)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적절성이 중점 반영되도록 자금세탁방지 활동 평가기준 개선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의원안: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2021. 8.

[김병욱 의원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규제 신설 등](#) 2021. 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의원안: 보험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2020. 11.

[홍성국 의원안 등: 보험사기 관련 전담조직 설치 및 보험사기 처벌강화 등](#) 2021. 2.

[이주환 의원안: 보험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 2020. 9.

[윤관석 의원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운영 등](#) 2022. 5.

[박재호 의원안 등: 보험사기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2022. 11.

[김병욱 의원안: 보험사기 확인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등](#) 2022. 9.

[이종배 의원안: 보험사기죄 벌금형상향 및 법정형 정비](#) 2022. 9.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 2022년 제1회 소비자지향성 정책포럼](#)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은?](#)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강화됩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누리집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향](#)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1-17 2021. 9. 14.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며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만 할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환경이 확대되면서 1:1 상담과 같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영업행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불법·불건전 자문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 끝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하여 규제하고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소고](#)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1-16호 2021. 8. 9.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을 통해 미등록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방식을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을 금지하는 조치로 주식리딩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

선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에 대한 감독인력을 현재보다 크게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11 2023. 9.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과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나. 문화재 영향진단 제도 도입

개요

문화재 영향진단이란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계획(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그동안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경우 지상에 남아 있는 것과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 전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를, 후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지표조사 등’을 거치도록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지난(持難)한 규제 절차에 대한 비판과 함께 김포 장릉 경관 훼손 사건과 같은 현행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복잡한 허가 절차를 일원화하고, 문화유산의 가치 훼손과 문화유산 인근 지역의 개발계획·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며,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입법정책브리핑 제2023-6호 규제혁신](#)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본회의에서는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한 「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법률안과 함께 법률 체계 정비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영향진단법안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2024-01-25 (수정가결)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p>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간 갈등이 빈번하며 건설공사 지역에서 매장 문화재 발굴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갈등문제로 문화유산과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이해충돌로 인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음. 특히, 문화재 지표조사·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이에,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및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문화재영향협의를 통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p>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문체부)

과제목표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보호기반 조성
현장 중심·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

주요 내용

- (국가유산 체제 도입)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문화재명칭·분류체계를 국제기준 등에 따라 개편(법체계 정비)
 - * 재화 개념 '문화재' ⇒ 역사·정신을 아우르는 '국가유산' 변경,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
 - 역사문화권 조사 및 정비·육성, 비지정문화재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으로 미래 역사문화자원의 보호기반 강화
- (청와대 개방 및 역사 보존·활용) 청와대 권역을 국민에게 개방하고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면서 국민의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활용
 - 청와대 전면 개방, 문화재 기초조사 및 정비 등
- (문화재 규제 개선)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23~),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영향진단 제도로 규제 일원화 ('지표조사'와 '현상변경 허가' 통합) 등 국민불편 해소
-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 및 미래형 전승체계 구축
 - * 전승공동체 육성 및 전승취약종목 맞춤형 지원 등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 DB 구축 등 문화유산 보존·활용기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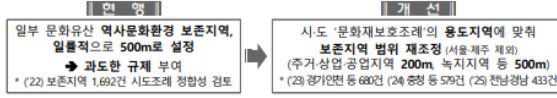


2023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202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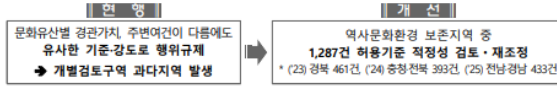
III-III 불합리한 규제 혁신·공공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갈등 해소

□ 문화유산 주변 규제범위 축소 및 규제강도 완화

- (규제범위 조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에 따라 재조정, 규제범위 명확화 및 규제완화지역 확대



- (규제강도 완화) 문화·유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검토구역 최소화, 지자체 자체 검토구역 확대



□ 영향진단 제도 도입 및 디지털규제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증진

- (영향진단 도입)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를 '문화재 영향진단'으로 통합·일원화



* (시행사업) LH 등 5대공사의 도시개발대규모 국책사업시 사업초기에 현상변경 등 관련 사전선실형 제공

- (디지털규제시스템) 3D 시뮬레이션 등 디지털 기반 규제 플랫폼 구축으로 예측가능한 문화유산 규제행정 실현 및 규제수용도 제고



* (디지털 트윈 기반) 문화유산 주변 지역 규제내용을 3D 가상공간에 구현하여 건축허가 등 의사결정 지원

출처: 2023년 문화재청 주요업무계획 문화재청 누리집

참고 자료

[문화재영향진단법안 및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 2.

김승수 의원안: ... 일원화된 문화재영향진단 체계의 법적근거 마련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23.06.22.\)](#)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줄어든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간소화...지자체 자율권 확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개요

그동안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

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20대 인구의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총인구 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지방대학이 당면한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방대학의 역량 증진만을 초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이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뿌리를 내려 지역의 성장을 이끄는 교육-일자리-정주여건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지방대학의 · 약 · 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제도 도입, 지역 핵심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공공기관 등에 지역인재 채용 노력 의무부과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역량을 증진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힘써 왔습니다. 국회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본회의에서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교육위원회	<p>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p> <p>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 이상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p>	2024-01-25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교육부)

과제목표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강화

주요 내용

-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 설치
-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도입('23~)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을 확산(수요맞춤형 교육)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 운영,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확대('26년, 17개)
-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 양성,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 강화
-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 제공
-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23년) 및 마이스터대 지원확대
 -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추진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트랙 마련

참고 자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안: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명시 및 평가 반영](#) 2021. 7.

[김윤덕 의원안 등: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및 비율 명시](#) 2020. 8.

[조경태 의원안: 지역인재 채용 노력 기업 범위 및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 2022. 4.

[김영식 의원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및 지역인재 채용 권고 대상 기업 범위 확대](#) 2023. 9.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지방 할당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누리집 정책참고자료실

[\[사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지방대 살릴 묘수되나](#) 영남일보 2024. 1. 29.

[\[시사이슈 찬반토론\] 특정대학 쓸림 '공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 없나](#) 한국경제 2023. 10. 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7. 11. 6.

이 글에서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의를 검토한 후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대육성법」 이후 지역인재의 입학 및 취업 실태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2023-08 2023. 12.

본 연구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

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4.07.29.)된 지 약 10년이 된 시점에서 지역인재의 지역대학 입학 기회 확대 및 지역 취업 우대의 실태와 성과 및 과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역인재의 지역대학 입학 및 지역 취업 현황 및 변화,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인재의 육성 및 지역 정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개선·발전 과제를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16-9 2016. 10. 31.

본 연구는 지역사회가 직면하게 될 경제·산업·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대학이 연계하여 어떠한 인재지원 정책을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및 과제를 제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지역-대학 상생의 인력양성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15-26 2015. 10. 16.

본 연구는 지역-대학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업을 요구하는 인력양성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대학-산업을 원활한 연계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